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자 료

금융은 **튼튼**하게 소비자는 **행복**하게

보도	2023. 10. 27.(금) 조간	배포	2023. 10. 26.(목)		
담당부서	금융데이터실 금융데이터검사팀	책임자	팀 장	손성기	(02-3145-7185)
		담당자	선 임	황준혁	(02-3145-7186)

채권추심업계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대표이사 간담회 개최

I 간담회 개요

-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업계의 영업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'23.10.25.(수) 전체 채권추심회사(총 24개사) 대표이사와 협회(신용정보협회) 집행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음
- 이번 간담회를 통해 채권추심업계의 내부통제 주요 취약점 및 위반사례 등을 전파하고,
- 채권추심업계의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실질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, 업계의 현장 목소리(애로사항 등)를 청취하였음

채권추심업계 간담회 개요

☑ 일 시 : '23. 10. 25.(수) 14:00 ~ 16:00

☑ 장 소 : 금융감독원 9층 대회의실

☑ 참석자 : (금감원) 전략감독 담당 부원장보, 금융데이터실장, 금융데이터검사팀장

(채권추심업계) 24개 채권추심회사* 대표이사

* 농협자산관리, SCI평가정보, BNK, DGB, SM, 고려, 나이스, 나라, 미래, 새한, 세일, 신한, 아이비케이, 에스지아이, 에이앤디, 에프앤유, 오케이, 우리, 제이엠, 엠지, 중앙, 케이비, 케이에스, 코아신용정보

(협회) 신용정보협회 집행임원

II 주요 논의 사항

1.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불법 채권추심 방지

- **(현황)** 관리자(본점 및 지점장)가 불법추심 방지를 위해 채권추심 담당기간(수입일 ~ 수입종료일) 동안 모든 수입채권의 소멸시효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음
 - **(개선대책) 3단계 관리체계** 시행
 - **(1단계 : 추심위임계약 체결단계)** 소멸시효 완성채권 수입시 명확히 구분하여 채권관리시스템 등록
 - **(2단계 : 수입사실 통지단계)** 채무자에게 수입사실 통지시 채무자의 권리사항(시효기간 관련자료 요청 및 추심중지 요청 등) 충분히 안내
 - **(3단계 : 시효완성채권 사후관리 단계)** 채권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시효완성채권 관련 불법추심행위* 엄격히 통제
- * (시효완성채권 추심관련 주요 위반유형)
- <유형①> “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를 유도”하기 위하여 소액 상환유도 및 일부 감면 등을 통해 위계(僞計)를 사용하여 추심
- <유형②> 채무자가 정당하게 항변(소멸시효 완성 주장)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채권추심을 지속

2. 권한없는 채권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방지

- **(현황)**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행위를 할 수 있는 자로, ①수입가능 채권* 外에는 수입할 수 없고, ②추심회사가 채권을 직접 매입하여 추심하는 것은 금지
- * (수입가능 채권의 범위) 채권추심회사는 ①상사채권 및 ②판결/공증 등에 따라 집행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 등에 한해서만 수입 가능

- ①수입불가 채권을 수입하여 추심, ②위임직 추심인 등이 채권을 매입하여 직접 추심, ③본인이 수입한 채권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사적으로 추심하는 등 위반사항 존재

- **(개선대책)** 관리자(본점 및 지점장)가 권한없는 채권(수입불가 채권, 매입채권 추심 등)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채권원인서류* 및 채권관리시스템에 대한 충실한 점검 실시

* 채권추심위임 계약서, 거래약정서(차용증 등), 상사채권 인정서류(사업자 등록증 등), 민사채권 집행권원(판결문, 공증) 등

3. 적법한 수입사실 통보를 통한 채무자 권익 보호

- **(현황)** 채무자에 대한 수입사실 통보 의무는 채무자 보호 등을 위해 마련된 절차로서, 수입사실 未통지시 채무자가 추심개시 前 대응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확인*하지 못하는 피해 발생

* 추심채권 관련 명세, 채권추심회사(담당자) 정보, 채권관련 이의신청 방법(시효기간 관련자료 등 요청 가능) 및 추심 중지 요청 방법 등

- 부적정한 통보양식 운영(통보양식 內 필수통보사항* 일부 누락 등), 채무불이행 기간 확인소홀 등으로 인해 채무자에게 수입사실 통지시 필수통보사항 일부를 누락하는 사례 빈번

* 채권추심자의 성명·명칭 또는 연락처, 채무에 관한 사항(채권자 성명·명칭, 채무금액, 채무불이행 기간 등), 입금계좌 관련 사항(입금계좌번호, 계좌명 등)

- 특히, 필수통보사항 중 “채무불이행 기간” 未통지로 인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제때 확인하지 못해 채무자의 권리(소멸시효 완성 항변)를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 초래

- **(개선대책)** 필수통보사항 누락·오류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입사실 통보양식 및 실제 통보내용 등에 대한 일괄 점검 실시

III 채권추심업계 의견

- 채권추심업계는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추심영업 관행을 개선해 나가고, 고금리 시대에 민생피해를 줄이는데 채권추심업계도 일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,
 - 향후 신용정보협회를 중심으로 채권추심업계가 합법적인 추심업무를 수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 중심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진행하기로 함

IV 향후 계획

- 향후 금융감독원은 ①추심업계의 개선대책 이행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, ②관리자(본점 및 지점장) 등의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으로,
 - 불법·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취약 금융소비자를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임